

“2327억 투입 강동 자원순환센터 공사, 발주방식 변경”

박원순 시장 시정질의

설계적합최저가→가중치 기준
기술적인 측면 고려해 턴키 채택
9월 입찰, 내년 4월 낙찰자 선정
강북구 종암로에 BRT 확대 설치

서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설계적합최저가 결정방법이 기존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에서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가중치기준 방식 적용 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비율은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고덕·강일 지구 등 강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적환 등을 위해 서울시가 고덕동 아리수로87길 272 일원에 4만 2553㎡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자원처리 시설이다. 사업비로 총 232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해당 사업의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으로 진행하고, 낙찰자 선정은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입찰 참여 업체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됐다.

김수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공사에 적용된 사



박원순 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례가 많지 않다”며 “발주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유찰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턴키 방식을 지양하고 있지만 고기술, 사후 관리 책임성 등을 고려해 강동구청과 전문가의견을 수렴, 부득이하게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며 “다만 턴키 방식을 적용했을 때 대형공사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 예산을 줄이면 서도 기술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최적

의 안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서울시가 턴키를 원칙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황 본부장은 “강동구에서 턴키로 제안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강동구는 복합공정, 성능보존, 책임소재 단일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턴키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 턴키를 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황 본부장은 “발주방식은 기존의 턴키는 그대로 준수하되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을 가중치기준적정

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가중치는 심의위에서 정하겠지만 기술성과 가격 기준을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턴키방식은 일반 분리발주보다 유찰률은 높지만 실시설계 중 공사를 바로 진행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입찰 절차를 9월 중 진행, 내년 4월까지 낙찰자 선정을 끝내고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유찰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주방식을 바꿔 추진해 공사 지연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턴키는 이번 공사의 성질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성능보존이 필요한 경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길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 연구직 확충이 아닌 해외연수에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출연해도 운영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지자체에서 688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거뒀다. 서울시 본청에서 140억원, 자치구에서 28억원 등 총 출연금의 24.5%를 시가 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돈은 지방정부에서 받아가는데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으로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게 맞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가 가장 전형적으로 지방분권의 철학을 도모시키는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법령 체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또 “강북구 미아사거리와 종암사거리가 서울시 내에서도 교통지옥으로 유명하다”며 “특히 미아사거리의 경우 2009년 서울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시장은 “종암로 복지병원 앞에 BRT 확대 설치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하철기지서 701가구 태양광 전력 생산

서울시 방화 등 차량기지 4곳에
2162kW 규모 ‘태양광발전소’
월 208MWh 전력 생산 기대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방화·모란·천왕·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 정비고 지붕에 216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신창·도봉·수서 등에 설치된 9개소(총 6732kW)에 이어 총 13곳으로 확대된다.

시는 방화·모란기지에 총 1010kW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다.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연내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내년 3월에는 천왕·고덕 기지 옥상에 1152k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해 같은 해 6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기지 4곳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이 완료되면 매달 약 208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서울 지역 701가구가 한 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일반 가정 월평균 전력 사용량 296kWh)과 맞먹는다.

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지붕도 함께 보수한다. 그동안 차량기지 정비고(옥상)는 지붕이 낡아 빗물이 유입돼 누수가 발생하고 지붕 자재의 부식이 심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은 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차량기지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부지를 임대, 태양광 패널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사업을 총괄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시행 방안을 수립, 양공공간 소통을 돕는다.

김원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태양광은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로 꼽힌다”며 “서울에 소재한 정부기관,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강북구 삼양동 빈집 3채 청년위한 공간으로 변신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동의 빈집 3채를 청년주택과 청년거점시설로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6~7월 중 공사를 시작해 연내 준공한다는 목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증·개축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빈집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침체된 저층주거지 주변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강원 산불’ 산림피해지 복구 나서

경관 복구 등 거쳐 ‘서울의 숲’ 조성

서울시는 강원도 산불 산림피해지안에 ‘서울의 숲’을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황폐화된 산림을 신속히 복구하고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산림청-강원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한 ‘서울의 숲’ 조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복구 관련 기술과 행정을 지원하고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한

다. 강원도는 숲을 만들 대상지를 제공하고 조성 후 유지 관리를 맡는다.

서울의 숲 조성은 관광지 주변 등 시급하게 경관 복구가 필요한 국·공유림에서 우선 진행한다. 시는 11월 서울시민, 강원도민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전국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하루빨리 강원도 산불 피해지가 복구돼 활력이 넘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수원시 ‘세계화장실 리더스포럼·컨퍼런스’ 개막 제6회 세계화장실 리더스포럼과 콘퍼런스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원시를 비롯해 세계 17개국에서 온 32명의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경기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수사의뢰 3건·자격정지 1건 등 조치

아파트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 위탁 관리에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2~4월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 이상 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

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